



최 병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2014년 보건복지 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선도하는 사회정책의 중심 연구기관'으로서 올해 보건복지 분야의 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에서 2014년은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국정과제가 구체화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중증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하락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 완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보험료 부과체계 및 수가·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정책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창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보

건의료산업의 육성 역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올 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시키는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는 일률적인 기초보장수급자 선정·급여 기준 대신에 가구의 니드에 따라 상이한 대상자 선정기준,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중위소득의 30~50% 범위에서 다양화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와 같은 보완대책과 아울러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이후에도 존재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배려하고, 근로유인정책 등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로까지 평가되는 맞춤형 개별급여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한정된 사회서비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혁하는 것 역시 2014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서비스 확충과 조정 등 양적(量的) 개입은 물론 서비스의 질적(質的)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 공급주체를 유인하여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 시민단체를 비롯한 제3섹터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해결하려는 노력과 협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초저출산현상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자녀 양육비용 감소정책, 일-가정양립지원정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의 성과와 한계를 심도있게 평가하고, 향후 인구 변화가 미래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길어지고 있는 노년기 삶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년 인구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자녀동거 부양’을 전제로 구축된 노인정책들을 ‘노인단독 거주’ 형태로의 가구구성 변화 추세에 부합하여 재검토할 시기입니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2014년 복지재정은 106조 4,300억원으로,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르게 됩니다. 올 해 복지예산은 기초연금 도입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충 등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배분이 증가하여 국민의 정책체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습니다. 건전한 재정과 공고한 사회안전망이 선순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고심하고,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